

국립공원 확대 계획 또 후퇴 송악산·마라도 등 지정 제외

지난해 “재산권 침해받는다” 주민 반발로 공청회 무산
 환경부, 10개월만에 절차 재개... 도에 협조 요청 공문

주민 반발로 중단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절차가 10개월 만에 재개된다. 또 환경부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을 다시 축소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도에 지난 2일 공문을 보내 오는 9월 30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을 발표하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8일 서로 만나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확대 후퇴 또 후퇴=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듬해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을 610km로 제안했다. 당시 환경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km에서 197.8km로 늘리는 것에 더해 오름과 꽃지알, 해양 등 328.7km에 이르는 지역을 새롭게 국립공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확대 지정 대상에 놓인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발하자 갈등 조정기구인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2020년 7월 우도·추자면과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지역 등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또 이런 권고는 환경부에도 전달됐다.

이후 환경부가 권고안대로 우도, 추자도, 표고 재배 지역을 비롯해 안돌·민오름 권역, 문석이·거미오름 권역 등 제주동부 오름군락, 중산간지대 꽃지알 사유지까지 제외하며 제주국립공원 지정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 303km로 축소됐다.

그러나 주민 반발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8일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을 들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잇따라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열지 못했다.

10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선 다시 손질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이 발

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직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 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수정된 계획을 미리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리일보가 파악한 결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은 303km에서 288.5km로 재차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빠진 지역은 송악산과 마라도, 중산간 권역 시험림, 동백동산 권역의 일부 지역 등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최종 결정=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밭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확대하는 등 그 구역을 변경하려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 차관, 각 부처 공무원,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가 끝나야 열 수 있다. 공청회가 끝나면 환경부는 제주도지사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이후 심의에서 확대 지정 계획이 통과하면 비로소 고시가 이뤄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2면으로 계속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7일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행사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이 전시된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이상민기자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 10일까지 국제컨벤션센터... 전시회 등 프로그램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가 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개막했다.

이날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전기차협의회와 함께하는 국제전기차엑스포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e-모빌리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B2B·엑스포, 비즈니스엑스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기차뿐만 아니라 e-모빌리티 및

전·후방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과 전기차 수출전진기지 대한민국을 리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 각국은 온난화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는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전기차 세상을 그리며 녹색회복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굳건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일까지 제주ICC와 온라인

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가속화하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을 조망하고 배터리와 소재 및 전장 등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전반과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을 폭넓게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하늘을 나는 e-모빌리티로 주목받는 도심형항공교통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글로벌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도 마련된다.

올해 엑스포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참가기업과 관계자, 참관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효과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지방공기업, 존재 이유 묻고 싶다” 좌남수 의장 도의회 임시회 폐회사 통해 비판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최근 제주도 산하 공기업들이 경영평가에서 낙제를 받은 것에 대해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라며 작심 비판했다.

좌 의장은 7일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 평

가에서 제주도 산하 공기업들이 모두 하위권을 차지했다”며 “제주도 상하수본부가 전국 최하위인 '라' 등급,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가 하위권인 '다' 등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막대한 형세 투입에도 경영성과는 저조하고, 각종 비위 의

혹이 발생하는가 하면 늘어나는 재정 지원으로 도의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좌 의장은 “지방공기업 뿐만 아니라 도 산하 13개 출자·출연기관 모두 경영실태를 재점검해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고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책무를 다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도정에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비자림로 조기 개설 결의안 본회의 통과

찬성 26·반대 7·기권 2명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이 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전체의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

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동료 도의원 26명이 동참하고 있다.

당초 결의안에는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조속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

의 대책 마련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요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로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환경단체는 “결의안이 갖고 있던 반민주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669
 7월 17시 기준

이전희 컬렉션 이충섭 특별전

70년 만의 서귀포 귀향 歸鄉

2021. 9. 5. 일 - 2022. 3. 6. 일
 서귀포시 이충섭미술관

창작뮤지컬 「이충섭의 MEMORY」
 9.16. - 9.18. 목-토
 서귀포예술의전당

이충섭 예술제
 9.25. - 9.26. 토-일
 이충섭공원 일원

창작오페라 「이충섭」
 10.1. - 10.2. 금-토
 서귀포예술의전당

제24회 이충섭세미나
 10.14. 목
 서귀포시 칼호텔

이충섭미술관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ulture.seogwipo.go.kr/jslee>

주최·주관 **Jeju**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문의 이충섭미술관 064)760-3567